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FTA · 첨단산업 협력 강화

고등교육 협력 · 수소경제 협력 MOU 2건 체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과 수소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이스라엘 FTA의 조기 타결과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고 벤처 창업 분야 경험 공유 의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면서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 넘게 우호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며 "양국 교역 규모는 지난해 27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01년부터 양국정부가 공동출자하는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 사업을 통해 무인항공기 등 첨단 분야에서 공동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구조를 갖고 있고, 미래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더욱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양국 간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 간 투자, 서비스 등 경제협력의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국민 1인당 IT기업 창업 수가 세계 1위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며 "한국도 혁신성장 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혁신 벤처 창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양국 민족들 사이

에는 대단히 큰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2차대전 이후 71년 전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아주 큰 재난에 직면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차대전이라는 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위대한 민족 국가를 건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 국가들과의 신뢰 부재라고 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웃 국가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촌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지도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며 "과거에는 전선에만 미사일의 위협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위협이 민간인과 국민들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육군이 필요하면 육군을 증강시켰고, 해군도 그렇게 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수소경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5G 정보통신기술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 구조 하에서 최적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또 활발한 인적교류가 굳건한 양국 관계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양국 대학 간 학술 및 학생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 및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에 관한 총 2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어졌다.

고등교육협력 MOU는 양국 고등교육 기관 간 직접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등교육 관련 교육 정보와 출판물 교환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수소경제 협력 MOU는 수소총천소 등 인프라 보급,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양국 주요 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블린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식 오찬을 주최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14일부터 4박 5일 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리블린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2년 8월 통신부 장관 재임 당시 한국을 찾은 후 17년 만이다.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서는 2010년 페레스 대통령이 이후 9년 만이다.

청와대는 "우리의 대중동 외교 의언을 확대·다변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중동 지역과의 교류 강화와 동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뉴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소셜벤처 육성 공모 선정

지역위기 해결 · 지방형 소셜벤처 테스트베드로 운영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전, 부산센터와 함께 소셜벤처 육성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전북도를 포함해 최종 3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돼 지역별 2억원을 지원받는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소셜

벤처 창업 및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또 지역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협력 및 컨소시엄 구성, 협업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도 적극 지원하고자 센터와의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창업지원, 성공창

업 및 스케일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맞춤형 컨설팅 등이다.

특히 전주시 팔복산단의 금속가공 소공인들의 기술 역량 활용, 사회적 인식개선, 경쟁력 강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위기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도 소셜벤처 창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지역 소셜벤처의 발굴과 육성은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혁신성장의 역할을 갖춘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디자인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가져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전북테크노파크(TP, 원장 강신재)는 15일 김경수 전북도의원, 이남섭 도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전북 디자인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디자인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다.

용역은 오는 2030년까지 전라북도

디자인산업 종합발전 비전과 디자인 육성사업 등 중장기 디자인 산업육성 전략기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자인산업은 일반 R&D투자대비 3배, 기존제조업의 2배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전라북도는 2018년 4월 디자인센터를 설립해 디자인관련 시설, 예산 등을 집중화하는 한편,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디자인산업

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전북도는 디자인 산업의 명확한 산업정의, 실태조사, 비전 및 세부사업 등을 발굴, 지역 디자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전북테크노파크 강신재 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경제 상황을 보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육성체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며 "이번 용역을 기반으로 어려운 도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81만건 1550억 부과

전북도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1만 건, 15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20만원의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1378억 원보다 171억 원(12.4%)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건축물의 경우 올해 고시된 신축건물가액이 71만원으로 2만원 증가된 점과 주택분은 재산세 일시납 기준이 기존 분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이 달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일 0.75%씩 60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론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박차

익산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한을 위원장과 정도상 부위원장 등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두 번째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회 추경 때 확보한

기금 5억 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했으며 6·30 남북미 정상회담 후의 남북동향에 따른 익산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유라시아 철도 사업추진을 위한 철도정책계

를 신설했고, 3월에는 남북교류전문가 9명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데 이어 6월에는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한을 위원장은 "익산시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최적의 요건을 갖춘 도시로 앞으로 도시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외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